



## I. 우리나라 기업 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및 평가

◇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틀이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개혁수준의 보완이 필요

□ 최근 대우건설('13년), 모뉴엘('13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15.8월~)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 발생

- 회사 재무제표가 경영진 이해에 맞게 조작되면서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피해 발생 및 기업 경영 자체에 대한 신뢰 상실

⇒ 회사 분식회계와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론 확대

□ 대내외 기관이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의 회계 투명성·신뢰성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세계 하위권 수준

- 조사방식이 기업의 임직원 대상의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시 기업 스스로가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② '15년말 회계투명성에 대해 기업·학계·공인회계사 대상으로 실시한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통 수준인 4.22점(7점만점) 기록

- 기업(4.93점),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공인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 →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공인회계사가 낮게 평가

⇒ 우리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처방이 필요한 상황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

-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향

-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자료 협조도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

⇒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필요

② (감사인) 감사인의 소극적인 감사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

- 자유선임제 下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되는 구조

-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 의견거절 등 결단력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甲乙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정화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음

⇒ 독립적 감사환경 조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 도모

③ (감독당국)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에 한계

- 막대한 수준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

- 감리인력 부족으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짐(상장회사 약 25년)에 따라 회사·감사인이 회계부정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음

⇒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해 나갈 필요

◇ 회사·감사인·감독당국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 구성·운영(' 16.8월~)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 II. 그간의 회계제도 개선 추진내용

◇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선진 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 시행중('16년~)
- 지난해 회계규제의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17.1월 국회제출)

### 1. 감사인 선임 관련

□ (감사인 지정사유 확대) 재무상황이 좋지않아\*, 분식의 위험이 높은 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확대('15년~)

- \* 최근 아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외감법수 개정, '15년~)
- ① 부채비율(부채/자본) 업종평균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 200% 초과
  - ③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 (감사인 지정 활성화 유도) 회계의혹 기업이 의혹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시 심사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고, 지정감사인이 회계오류 발견시 조치수준 감경('16년~)

□ (감사인 선임주체 · 시점 변경) 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대상인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 \* 현재는 경영진이 선임하고, 감사·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98년~)

- 감사의견 제시 후(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어, 감사에 영향을 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단축(외감법 전부개정안)

### 2. 회사 재무제표 작성

□ (선진 회계시스템 구축) 기업의 회계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04년)

- 아울러,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11년)

□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수주산업 회사들의 원가 산정 및 수익인식 방식 등을 개선하여 자의적 회계처리 최소화('15.10월)

- 주요 사업장 총예정원가와 미청구공사\* 금액을 분기마다 재평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미청구공사 금액은 충당금으로 주석 공시

\* 장기간 건설계약에 대해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발주처 지급여력 부족 또는, 원가투입량이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청구가 곤란한 경우 발생

- 아울러, 투입법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주요 사업장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 정보를 추가 공시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14.7월~)

\* 재무제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주의·경고 / 감사인 지정 1~3년 등의 제재를 부과

□ (회계규율 대상회사 확대) 유한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예: 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한 회계규율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외감법 전부개정안)

□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강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외감법 전부개정안)

※ 현재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은 금지하는 반면, 회사가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 3. 내부 감시기능 활성화

□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내·외부감사, 지배구조간 역할·기능 재정립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제시(금감원, '15.12월)

□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상향\*하고 포상금을 주는 신고대상 회사도 확대(상장회사→모든 회사, 외감법 개정안)

\* 1억→5억으로 증액하는 외감법시행령 개정중(법제처 심의중이고 추가상향 검토중)

#### 4. 외부감사 품질 제고

- (비감사용역 제한)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 서비스 제한 확대('16.3월)

\* 회사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 총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감사과정에서 회사·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감사하고,

- 핵심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을 통해 장문(長文)의 형태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술('16.1월~)

\* 주요 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 당기 재무제표중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 사건들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중에서 선택된 것으로서 감사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를 요하는 것

- (감사인 감사품질 관리 강화) 법상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외감법 전부개정안)

#### 5. 감리·제재 강화

- (과징금 건별부과)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개선('16.7월~)

※ 현재 과징금 부과상한은 20억원이지만, 위반행위건수에 따라 과징금이 합산되어 과징금 상한이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효과

-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외감법 전부개정안)

⇒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 III.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1 [회사 측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 1.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내부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부정 감시·통제 역할 미흡

※ 현행 외감법상 내부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 위반사항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감사인에 통보하도록 규정중

- ① 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사실 등을 발견해 내부감사에 통보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내부감사가 경영자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 ② 회사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성을 위해서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협력이 필요한 반면,

- 실제 내부감사의 권한이 약해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갖기 어려움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내부감사는 회계처리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즉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전달받은 후 1영업일 내에 중선위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의 주요 감사내용 보고사항에 지배기구 및 내부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구분하여 공시하게 하고,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평가요소 보상 결정방법, 감독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야함

## [2] 개선방안

- 내부 감사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절차 등을 의무화

- ① (내부감사의 조사·조치)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는 독립성·적격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 → 그 결과를 중선위·감사인에 동시제출

-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同 조사·조치에 따른 지원의무(전문가 용역비 지급 등) 부과

※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손해배상 책임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미국 사례) 부정행위 등의 징후를 감사인이 인지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인은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기초로 감사의견 표명

- ② (공시 강화)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내용·빈도에 대한 공시의무(적용대상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마련

- 적절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

#### ※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공시대상(예시) :

- 감사인 선임경과(감사인선임위원회·추천위원회 운영경과 등)
- 과거 3년간 선임방식(자유수입/지정), 자유수입 방식(수의계약/공개입찰)
- 독립성 훼손여부 :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등
-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

- ③ (면책 활성화) 내부감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 회계부정이 발생했더라도 내부감사가 제역할을 다 했을 경우 적극 면책(면책근거는 개정 양정기준에 기반형, '16.7월)

##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공시서식 등 개정 (금융위)



##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은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접하고 있는 내부자 고발없이 적발이 쉽지 않은 측면\*

\* 회사의 회계부정 또는 경제범죄의 약 1/3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

-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고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법제처 심사중)

- 다만,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도 제기

- 아울러, 회사가 내부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의 제재수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약한 편으로 신고자 보호기능이 미흡

\* 신고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외감법 §20) 수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 감독당국과 대표적 회계정보 이용자인 신용평가사간 감리 관련 정보수집(회계의혹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 현재 금감원 민원 또는 회계분식 제보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신평사의 전문가적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 < T/F 연구진 제안 · 논의사항 >

- 회계부정이 심할수록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커지므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내부고발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고려 가능

- 내부고발자 신분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현행 3천만원)를 상향조정할 필요

- 한편, T/F 논의과정에서 금감원 DART 등에 회계부정과 관련한 별도의 Q/A 시스템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음

\*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운영중이라는 의견

-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외부 신용평가사나 언론사 기자 등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회계부정 제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

## (2) 개선방안

- 내부고발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도 강화

### ① (포상금 상향)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 포상금 산정기준상 기준금액도 상향조정하여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

† (현행 산정기준) 기준금액[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5등급, 5백만~5천만]\*  
× 기여율(신고내용 충분성,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 0~10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2배 적용  
※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해당 과징금 규모와 연동(예 : 과징금의 10%)  
하여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안 추가 검토 후 결정(미국도 유사)

### ② (내부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sup>①</sup>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sup>②</sup> 신설

\* ①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②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 아울러, 내부신고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사실을 중선위에 신고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추가적인 패널티를 부과

\* 금감원에 '내부고발 활성화 및 보호 전담인력'을 배치

#### ※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신고자 보호수준

- ①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1~2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③ 공익신고자 등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분보호 조치 요구 가능

- 신용평가사 등이 재무제표상 분식혐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금감원-감사인-신평사간 협의체 구성

##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회계관련 포상규정 개정 (금융위) / 내부고발자 보호인력 배치 및 협의체 구성 (금감원)

###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 (1) 현황 및 문제점

- ☐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중\* → 경영진과 이사회에 무관심으로 제도가 실제 업무와 괴리

\* 회계제도 개혁 T/F 연구진 설문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46%로 나타남

※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설치 의무화

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의 관리 및 통제절차에 관한 사항등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확신 정도가 '감사' 보다 낮은 '검토' 수준 → 형식적 외부 감사

②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별도의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토록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대상이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되어 주주에 의한 직·간접적인 통제는 미흡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책임 및 보고의무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수준을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
- ☐ 그 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실체 중심으로 운영(종속회사 포함)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함

#### (2) 개선방안

- ☐ 감사인, 주주, 내부 임·직원의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 도모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 → '감사'\*로 상향 (현재 미국·일본의 경우에도 감사 수준으로 인증)

※ 일반적으로 검토 수준에서는 검사, 관찰 또는 조회를 통한 사실확인 등 다양한 입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직접 사실확인을 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검 토	감 사
주요 목적	내부통제 관련 중요한 위반사항의 발견여부 보고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의견표명
주요 절차	질문, 분석적 검토 등	입증감사 절차
법적 책임	낮 음	높 음

- 다만, 인증수준 상향에 따른 회사들의 감사부담을 감안하여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 ~ (149개 법인)  
 " 5천억원 " : '20년 도입 검토 (220개 법인)  
 " 1천억원 " : '22년 " (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등 거래소 시장조치는 당장 적용하지 않고 제도 시행후 안착추이를 보면서 적용

②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감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보고토록 함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심있게 챙기는 가운데, 주주의 모니터링을 통한 경영진의 내실있는 제도운영 유도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이사 및 직원을 상장협·코스닥협회에서 등록·관리 → 담당자의 회계에 대한 관심 및 책임성 제고

\* 현재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중

####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개정(금융위) / 내부회계담당자 관리(상협·코협)

##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내에 사업·감사보고서를 금융위·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회사-감사인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감사증거를 적시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도
    - 기업의 요구, 감사계약 유지, 소송가능성(관리종목 지정시 등)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에 맞춰 감사의견을 제시
  - \* 법정 제출기한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시 다음 해당 보고서 제출시까지 관리종목 지정 / 2회 이상 기한내 미제출시 또는 연차 사업 보고서 기한으로부터 10일 내 미제출시 즉시 상장폐지
  - 이 경우 감사인이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그만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
- ⇒ 필요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어느 정도 연장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 시간압박에 처한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주게 될 경우 약간의 기간 연장을 허용
- 금감원 또는 거래소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 퇴출대상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출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일반회사들이 이를 남용하여 보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감사인은 지연사유를 회사 경영진과 내부감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이를 공시 → 거래소는 사유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정지

### [2] 개선방안

- ☐ 시간제약으로 감사의견을 내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하에 금감원 보고후\* 지연사유를 미리 공시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 \* 예) 제출기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제출기한 연장계획 보고
- 다만,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중요한 만큼, 아래의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 → 제도의 남용 가능성 최소화
- i)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
- ii)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
- iii)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
- 아울러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표본감리시 기한내 제출한 회사보다 높은 표본비율 적용 → 감리 확대
- \* 사업·감사보고서를 지연제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때 제출한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

#### ※ 해외사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공시하는 경우 연차보고서는 추가로 15일, 분반기는 5일까지 연장 가능

### [3] 조치 사항 : 자본시장법규 개정 (금융위)



## 2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 1.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감사인에 대한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 ⇒ 회사-감사인간 “甲乙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 연구진은 아래의 3가지 안 제시 :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는 입장
- ① (지정제 확대) 지정사유를 확대하여 더 많은 회사에 감사인 지정
- ② (혼합선임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9년 자유선임 후 3년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함(주기적 전면지정제)
- ③ (공동감사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동시감사

#### (2) 개선방안 : 직권지정제 확대 + 선택지정제 도입

##### < 직권지정제 확대 >

-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에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의 지정사유 추가 → 직권지정제 확대
- ①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内)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회사(재취업 포함)
- ②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별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 선택지정제 도입 >

- ☐ (기본방향)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 도입

##### ☐ 선택지정 대상

- ① (경제적 영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을 고려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 공정거래법령(法 제11조의 4, 순 제17조의11)에 따라 강화된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 ② (취약)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i) (지배구조) 소유·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 지분율 50% 이상(특수관계자 포함)인 지배주주가 회사 대표이사인 경우

\*\* 최근 3년내 코스피 상장사는 2회 이상, 코스닥 상장사는 3회 이상 변경

- ii) (재무상황) 최근 소액공모/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 최근 2년간 소액공모(3회 이상) or 타인(20회 이상) 또는 특수관계자(3회 이상) 신용공여 or 자산양수도(5회 이상)

- iii)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타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

\* 감사투입 시간이 동종업종·유사규모회사의 평균 대비 50% 이하인 회사

- ③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증선위에서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회사(현재 미정) → 예) 수주산업

\* 건설·조선 업종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C31, F41, F42, M72),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K-IFRS 제1011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체결 기업

□ (예외)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 다만,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이 허용된다고 인정되는 거래소 →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만, 100개국 이상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적 회계법인에 한함

□ (추천방식) 선택지정 대상법인은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pool)**을 증선위에 제시

※ 현행 **감사위원회 필수설치 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 선택지정 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 pool** 추천

※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 :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시)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임원인 주주 외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외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외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 (보완방안) 회사가 감사인 추천시 사전에 **감사보수 등을 협의**하거나 **감사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지 않도록 보완**

○ 회사가 **감사능력이 부족한 회계법인** 추천시 → 증선위가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동일한 행태시 즉시 **감리조치**

※ 한공회에서 상장협 등과 협의하여 **회사가 적정 감사인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회사 자산규모, 회계법인 경력 등 고려)을 제시할 예정

○ 회사가 사전에 감사보수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가 사전에 **감사보수 입찰가를 확인**한 것이 사후 적발된 경우 → 차년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 또한 **지정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정감사 기간 종료후 해당 회사의 **자유수입 기간 전체에 대한 감사수입 금지**

□ (운영방식)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 시행시 선택지정 사유가 있는 회사로서 과거 6년간 한번도 지정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부터 시행하도록 함

\* 예) 개정법 '17년 공포, '19년 시행시 :  
'18년 기준 수입상황, 즉 '13~'18년까지의 선임현황(계속 자유수입, 지정, 자유선임 감사인 변경 여부)을 보고 지정대상 여부 결정

<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예: '19년 시행시) 판단 >

- ① 최근 자유선임한 기간이 6년('13~'18년)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  
→ 6년까지는 자유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지정
  - ② 지난 6년 이상 자유선임했다 하더라도 **최근 감사인을 교체**('17~'18년)하여 1~3년의 계약 유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동 기간 종료후 지정
- ※ 다만,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직권지정

□ 감사인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식 관련 견해 차이 조율 필요**

① 감사인간 협의절차 등을 위한 **지침 마련**

② 단순 견해차로 인한 재무제표 수정에 대해서는 **전기 감사인 제재 감경**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개정 (금융위)

## 참 고

## 감사인 지정 사유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외감규정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건수	
		'15년	'16년
§10①1	① 감사인 미선임	-	5* (%)
§10①2	②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 위반	-	-
§10①3	③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	16 (12.4%)	17 (3.7%)
§10①4	④ 소유·경영 미분리(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임시 예외)	-	-
§10①5	⑤ 관리종목	40 (31.0%)	33 (12.7%)
§10①6	⑥ 상장예정 회사	-	-
§10①7	⑦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
§10①8전단	⑧-1 회사 요청에 의한 지정	-	3 (2.2%)
§10①8후단	⑧-2 타 법에 의해 관계기관 장이 지정 요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등)	-	1 (0.7%)
§10①9	⑨ 감사보수 미협의를 등으로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	-	-
§10①10	⑩ 주채권은행의 회사 동의에 의한 지정 요청	-	-
§10①11	⑪ 공인회계사법 §21/§33를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
§10①12	⑫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회사에 대한 지정 요청	-	-
§10①13	⑬ 부채비율 과다 상장회사	72 (55.8%)	47 (35.1%)
§10①14	⑭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발생 상장회사	1 (0.8%)	10 (7.5%)
§10①15	⑮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회사	-	18 (13.4%)
합 계		129 (100%)	134 (100%)

\* 감사인을 미선임한 5사는 모두 부채비율 지정사유에도 해당되며, 부채비율로 인해 감사인 지정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기한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2. 핵심감사제(KAM) 확대 도입

### (1)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감사(검토)보고서는 감사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감사과정과 그에 따른 감사인 의견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

\* 적정/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감사보고서에 동 정보도 미포함\***

\* 감사보고서 제목에 '외부감사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

- ☐ **한편, 우리나라는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은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 적용중**

#### ※ 핵심감사제 도입 개요(Key Audit Matters)

- **국제감사인준기준위원회(IAASB)는 감사인-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는 **국제감사기준**을 마련(16.12.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이를 통해 감사인이 '추정의 합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

- i) 감사인-회사간 협의로 **핵심감사사항** 선정 → **감사인 협상력·독립성 강화**  
 ii)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적극 중점감사 → **감사품질 제고**  
 iii) 단순 감사의견 제시가 아닌 보다 **상세한 감사결과** 제공 → **투자자 보호**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요구량이나 기대수준은 높으나, 현행 감사보고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사인과 이해관계자 간의 기대차이가 심각하다는 인식**

⇒ 수주산업에 대해 적용중인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상장회사 전체에 확대 적용**할 필요

## [2] 개선방안

- 핵심감사제를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되,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 (도입대상·시기) 회사의 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우선 적용[‘18년 사업보고서~(‘19년 작성)] → 자산 5천억 이상(‘20년 사업보고서~) → 1천억 이상(‘22년 사업보고서~) → 유가코스닥 전체(‘23년 사업보고서~)

< 시장별 상장회사 수(‘16년) >

(단위: 개, %)

구 분(15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자산 2조원 이상	147 (19.2)	3 (0.3)
5천억 ~ 2조원	185 (24.1)	36 (3.0)
1천억 ~ 5천억원	330 (43.0)	423 (35.5)
1천억원 미만	105 (13.7)	729 (61.2)
합 계	767 (100.0)	1,191 (100.0)

- (도입 준비) 의견수렴 등을 거쳐 KAM이 포함된 감사기준을 ‘17년 상반기중 개정하고, 하반기중 감사인 교육 등 연착륙 유도

- 핵심감사제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발생 가능

- ① (회사) 감사시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의혹 해소
- ② (감사인) 당기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기술함으로써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
  - \* 예) 영업권 손상테스트, 금융자산 평가, 新 회계기준 적용, 퇴직연금자산 및 부채의 평가, 수익인식, 계속기업 평가, 부문 매각 등
- ③ (투자자) 감사(검토)보고서 강조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된 핵심감사 내용을 통해 투자자 이해 및 합리적 투자판단 유도

## [3] 조치 사항 : 감사기준서 개정 [한공회]

## 3.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인들이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 수입을 위해 제대로 된 감사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

- 현행법상 감사인이 감사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비감사용역이 금지되어 있으나,

※ 현행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업무, 민사·형사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등

- 선진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 가치 평가 업무 등이 아직도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연결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감사나 컨설팅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 기준과 상이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공익-비공익실체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비감사업무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되, 비공익실체에 대해서는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완화
    - \* 상장회사, 금융기관, 기타 법률에 의해 공익실체로 정의된 단체 등을 공익실체로 규정 가능
  - 아울러, 공익실체의 경우 비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종속회사 등 연결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 다만, 연구진 제안과 달리, 한국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를 비감사용역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으로 독립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바,
  - 공익-비공익실체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음

## [2] 개선방안

- (비감사용역 금지 확대)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선진국(미국·EU) 수준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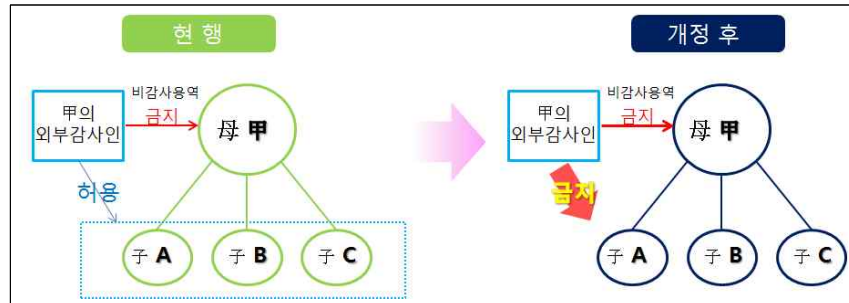
### 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 i)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 ii)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 iii)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 ②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고, 비감사용역이 제한되는 모회사의 범위에 상장회사 외에 상장 회사에 준하는 회사\*도 포함

- \* 예)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② 금융위설치법 등에 따라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③ 전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 (해외 사례) 미국과 유럽(EU)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실체 기준으로 비감사용역 금지 규제 부과



- (기타 독립성 강화방안)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참여자가 관련 법규에 따른 독립성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명시

- \* (EU 사례) ① 피감회사 연속감사 현황, ② 금지된 비감사업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비감사업무제공시 그 내용과 감사위원회 승인여부 등 독립성 관련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

## [3] 조치 사항 : 공인회계사법규 개정 (금융위)

## 참 고

## 우리나라, EU, 미국의 금지 대상 비감사용역 비교

구분	우리나라	유 럽(EU)	미 국
근거 법규	공인회계사법 §21②, 같은 법 시행령 §14③	Article 5(1) of Regulation (EU) 537/2014	Regulation S-X
적용 대상	모든 주식회사	상장회사 등 공적법인 (PIE; Public Interest Entities)	상장회사
금지 업무	①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① 기장,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① 기장,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②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② 내부감사기능 관련 업무	② 내부감사업무
	③ 재무정보체제의 구축/운영	③ 재무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또는 위험관리 절차의 설계/운영, 재무정보 시스템의 설계/운영	③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④ 자산등*의 매도를 위한 실사등**의 업무. 다만, 부실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14②, ③)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④ <b>가치평가</b> (보험계리/소송지원 업무와 관련된 가치평가 포함). 다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허용	④ <b>감정평가, 가치평가</b>
	⑤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된 보험계리업무	⑤ <b>경영진의 역할이나 의사 결정을 수반하는 업무</b>	⑤ 보험계리업무
	※ 현재도 공인회계사법상 감사 대상 회사 주식 보유 금지	⑥ <b>자금조달, 자본 구조/배분, 투자전략과 관련된 업무</b> (확인서 업무 제외), ⑦ 회사 주식의 홍보/매매/인수	⑥ <b>경영자 기능 업무</b> (임원진 역할 수행, 의사결정, 감시, 감독) ⑦ 투자중개·자문업,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 (중개, 인수, 투자의사결정, 투자거래 실행과 자산 보관)
	⑥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업무	⑧ 법률 고문, 감사대상회사를 위한 협상, 소송에서의 변호 업무 등의 법률 업무	⑧ 법률 업무
	⑦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 업무 * 급여업무 포함	⑨ 회계, 재무제표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있을 자의 채용, 후보자 탐색, 검증 등의 인력 채용 업무	⑨ 인력 채용 업무 (경영자 후보 탐색, 특정 업무후보자 채용 자문, 직책/보수 협상 등)
		⑩ 급여 업무	⑩ 감사와 관련 없는 전문가 서비스 (소송 등 절차 관련 회사 또는 법적 대리인 주장을 옹호하는 전문가 의견 제시 업무 등)
	* 자산등: 회사의 자산, 자본, 그 밖의 권리 ** 실사등: 자산등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그 자산등의 매도거래 또는 계약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 EU 회원국은 위 업무 외의 업무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금지시킬 수 있음	※ 1~5의 업무는 업무 결과가 재무제표 감사절차의 대상이 아니면 제공할 수 있음



## 4.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

### (1) 현황 및 문제점

- ☐ 감사인간 수주경쟁 심화로 인해 저가수입 발생 → 그만큼 감사 투입시간을 줄임에 따라 부실감사 초래
- 외부감사는 사실상 투자자 보호라는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정 감사품질 보장을 위한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

#### < 저가수입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에 대한 회계학회 설문 결과 >

구 분	기 업		공인회계사		합 계	
	명	%	명	%	명	%
매우 저하시킴	27	9.5	121	79.1	148	33.8
저하시킴	76	26.7	27	17.7	103	23.5
보 통	85	29.8	5	3.3	90	20.6
저하시키지 않음	60	21.1	0	0.0	60	13.7
전혀 저하시키지 않음	37	13.0	0	0.0	37	8.5
합 계	285	100.0	153	100.0	438	100.0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 연구진은 적정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안 제시
  - ❶ (1안) 최저 감사투입시간 규정화
  - ❷ (2안) 최저 시간당 감사보수 규정화
- ☐ 다만, T/F 논의시 최저시간당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개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2] 개선방안

### ☐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 \* 현재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법인,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최소 감사투입 시간을 적용, 운영(→참고)
- 다양한 기업 사정(자산규모·업종 등)에 맞는 감사 필요시간(특히, 보수)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율규제로 마련
- \* (산정방식)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로 Big 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회귀모형으로 추정

#### < 표준감사투입시간 예시(상장회사 기준) >

(단위 : 시간)

규 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120억원	860	850	950	1,100	950
250억원	1,040	1,020	1,160	1,280	1,140
500억원	1,260	1,230	1,400	1,540	1,370
1,000억원	1,520	1,490	1,690	1,860	1,650
2,500억원	1,950	1,910	2,160	2,380	2,120
5,000억원	2,750	2,300	2,610	2,880	2,560
1조원	3,830	3,130	4,300	3,130	3,650
2조5천억원	8,250	5,610	9,380	3,890	6,930
5조원	11,200	7,620	12,730	5,280	9,400

\* 규모는 (자산 + 매출액)/2로 산정, 금융업은 자산과 영업수익을 8:2로 가중평균

- ☐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통해 유도
-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 → 선택지정제 적용
-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양정시 고려)나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적극 활용
-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감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회계법인의 회사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의 일정비율 미만(예: 80% 미만)으로 반복되는 경우 지정감사인 선정시 불이익 부여

### [3] 조치 사항 :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한공회]

※ 자율규제 근거에 대한 법제화 추진 병행

- 한공회는 회원들에게 감사업무(외감·비외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감사시간을 권고중
- 최저감사시간은 실제 투입되는 시간(과거 3개년 평균) 및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 현재 업종별로 도입·적용하고 있는 최저감사시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업 종	최초 도입시기	최저감사시간 <sup>*2</sup>
농업협동조합	2012년	170시간
신용협동조합	2013년	100시간 (자산규모 300억 기준)
새마을금고	2013년	140시간 (자산규모 500억 기준)
사학기관(학교법인)	2016년	130~500시간 <sup>*1</sup>
수 협	2016년	170~260시간 <sup>*1</sup>

\* 1) 자산규모 고려

2) 적정감사시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사의 상황 및 감사참여자들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권고

## 1.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1) 현황 및 문제점

- 감사품질이나 손해배상능력과는 상관없이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가능

\*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 가능(공인회계사법 §24) → 현재 총 164개

-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로 인해 투자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 우려가 큼

※ (미국사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PCAOB 등록 법제화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① (1안 : 감사인 인증제) 감사 품질수준을 인증함으로써 감사인이 시장에서 평가·선택받게 함(인증이 없다고 하여 감사인 자격을 배제하지는 않음)
- ① (1-1안 : 다단계 인증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우수', '보통', '미흡' 인증 감사인으로 구분
- ② (1-2안 : 2단계 인증제)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인증' 감사인과, '미인증' 감사인의 2단계로 구분
- ② (2안 :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 등 내부운영 적정성, 담당이사 성과 평가지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회사 감사 허용 (미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격 배제)
- ① (2-1안 : 완화된 등록제)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 검사 등으로 등록 취소
- ② (2-2안 : 강화된 등록제)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건을 충족한 감사인만이 상장회사 감사 가능(사전적 규제 성격)

## [2] 개선방안

-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마련**
  -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同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
      - \* 예) 점수화된 품질관리평가 후(수치화) 일정점수에 미달하는 회계법인
    - 아울러,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 (예: 중요도 III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 ※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의 여러 가지 폐해를 시정 ⇒
      - ① 감사시간 확보, ② 내부 심리 및 품질관리 노력 강화,
      - ③ 영업 인센티브 → 감사노력으로 유도, ④ 저가수입 문제해결

###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예시) >

※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계량화)하여 등록 여부 결정

- ①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 ②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 ③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도입
- ④ 품질관리 적정인력 확보
- ⑤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

\* 자금·회계관리, 영업, 인사보상 등 제반업무가 조직 차원에서 통합관리되는 법인

##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개정 (금융위)

## 2. 금감원 감리 강화

### [2-1]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기업의 **평균 상장유지기간이 12.7년**임을 고려하면, 현재 **감리주기(약 25년)는 과도하게 긴** 측면
  - \* 약 2,000개 규모의 상장회사에 비해 현재 금감원 감리담당 실무인력은 38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 감리를 통해 언제든 회계부정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에는 **현행 감리는 불충분한** 측면

#### < 최근 감리 현황 >

구분	'13년		'14년		'15년		'16.11.17.현재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감리	53	10	37	10	66	8	48	17
혐의감리	17	15	32	29	47	44	43	39
위탁감리	35	30	20	18	18	16	15	14
합계	105	55	89	57	131	68	106	70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사전적인 분식회계 예방 및 상시적인 상장회사 모니터링·위험요인 파악에 따른 적시성 있는 정밀감리를 위해 **회계감독조직 개편 시급**
  - 현재의 2국 1실(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회계제도실)에서 **3국 3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감사인검사국(품질관리감리), 회계분석실(상시 모니터링), 특별회계감리실(대기업 특별감리·산업별 전문감리), 회계제도실
- 상기와 같이 **확대된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 확충**을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로 인력충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방안)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

\* 총 1,958개('16.12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 ① (감리조직 확대) 상장회사\*의 회계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리대상회사 수를 확대하기 위한 회계감리부서 추가 신설

⇒ 현재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의 2국 체제에서, 심사감리 조직("기획감리실")을 추가 신설하여 2국+1실 체제 운영

- ② (인력 보강) 매년 상장회사 10%(198사)를 감리하기 위해서는 현원(38명) 대비 28명을 증원한 66명\*의 감리실무인력 필요

\* 198사/3건(과거 5년간 1인당 평균 상장회사 감리건수는 3건)

※ 감리 실무인력(28명)과, 이에 대한 관리인력(9명) 증원을 위해, '17년중 20명을 우선 충원하고 '18년에 17명 추가 증원

- (조치 사항) 금감원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보강(금융위·금감원)

## [2-2] 감리 권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금감원 감리 권한수준으로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금감원내 감리부서 기피현상 야기)

- 현재 심사감리시에는 공시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

- 감리시 회사 및 감사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감리 소요시간 장기화 빈번 → 시의적 조치 곤란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밀감리로 들어가더라도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감리권한에 제한 → 효율적인 증거확보에 한계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① 금감원 심사감리시 회사에 대해 관련 증빙 및 기타 필요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 ② 금감원 정밀감리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 (개선방안) 늘어난 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감리권한을 금융기관 검사 수준으로 강화

- ① (심사감리) 심사감리시\*에도 정밀감리와 같이 회사·감사인에 대한 관련 증빙 및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여 강화된 심사감리 수행

\* 기존 심사감리시 증거확보 수단은 외부 공시자료에 대한 추세·비율분석 등 분석적 검토 및 회사의 소명내용 검토 등으로 제한

- 감사인의 감사조서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의 적정성도 점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 수행을 유도

- ② (정밀감리) 정밀감리시에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소위, '계좌추적권')를 인정하여 중대한 분식회계 관련하여 조사·추적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정밀감리시 실명법상 비밀보장 예외를 두는 것은 영장주의의 중요한 예외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

- ① 사회적물의를 야기하는 중대한 회계분식 혐의 관련 금융거래에 한정
- ② 회계분식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인성(합리적 의심)이 있을 것
- ③ 정밀감리에 착수한 경우에 한해 감리담당부서장 결재 하에 실시

- (조치 사항) 금융실명법 및 외감규정 개정(금융위)

### 3.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제재수준이 낮아 **징벌적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  
⇒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一罰百戒를 통해 **회사의 분식 유인을 없애고, 감사인의 책임감있는 감사를 유도**할 필요
- ❶ 증선위가 회사에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하더라도 주총에서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 임원을 해임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 부여방안 없음**
- ❷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에 비해 **과징금 상한(20억원)**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
  - \*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합산(건별부과)하는 경우 20억 이상으로 부과는 가능하지만, 건별 상한은 아직 존재
  -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척기간이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어, 현행 **감리주기(약 25년 → 10년으로 단축 추진중)** 등을 고려하면 **너무 짧다**는 지적

#### ※ 제재 관련 외감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 마련**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 회계 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 < T/F 연구진 제안·논의사항 >

- ① **(공통)** 분식회계에 대한 형벌 강화[회사(7년→25년) / 감사인(5년→20년)], 조치수준간 제재폭 확대
- ② **(회사)** 임직원 보수환수제 도입, 재취업 제한
  - \* 다만, 이는 상법 사안으로 금융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 ③ **(회계법인)** 등록취소·영업정지 적용 확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액 반환 금지

#### [2] 개선방안

-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외감법상 조치수준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대폭 상향
- ① **(회사 임원)**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 등 신분 제재 강화
  -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되지 않는 경우 **직무정지 연장** 및 **감사인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 부과
- ② **(과징금)**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
  - ❶ **(회사)** 과징금 부과한도 폐지[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개정안) → **분식금액 20%로 하고 상한 폐지**]
  - ❷ **(감사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한도 폐지  
(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 2배→5배, 20억원 한도→폐지)
  - ❸ **(개인)**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 **감사(감사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 \* 현재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 **이사**,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 과징금** 부과 가능
    - 아울러, **개인 과징금**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일정 비율(예:10%)**로 책정하는 방안 검토 → **회사-개인의 책임수준을 비례, 연동**될 수 있도록 함
  - ❹ **(부과시효)**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된 경우 시효 진행 중지
- ③ **(형벌)**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7천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 추진
  - 또한 **분식규모가 큰 경우\*** 유기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
    - \* 예) 분식으로 이익 10% 이상 흑자 전환 또는 20% 이상 이익 변동 등
  - ※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이득액 "50억 이상시 5년이상 징역"으로 가중



④ (몰수·추징)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

\* 현재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 내부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이익을 수수한 경우 필요적 몰수·추징(외감법 §19)

⑤ (손해배상책임 강화)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 연장(3년→8년)

\*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 인정, 입증책임 전환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로서 단기시효(3년 ↔ 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기간은 10년)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감리주기 단축(감사조서 보존기간 8년) 등 고려, 연장

⑥ (손해배상공동기금 반환 금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금전적 제재 성격 강화를 위해 추가적립금 반환 금지

\* 현재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는 경우 손해배상공동기금 기존 적립금에 더하여 추가적립하도록 하고 3년 후 반환하고 있음  
→ 추가적립금의 제재적 성격 고려, 반환 금지

< 외감법상 제재수준 및 개선방안 예시 >

구분	대상	현행	개선방안
과징금	회사	부과근거 없음 (외감법 전부개정안: 부과기준은 분식금액의 10%, 20억원 한도)	외감법상 부과근거 마련 및 상한 폐지
	감사인	부과근거 없음 (자본시장법규 上 부과기준은 감사보수 2배, 20억원 한도)	외감법상 부과근거 마련 및 감사보수 5배로 상향(한도 폐지)
형사벌	회사 임직원	7년이하 징역 or 7천만원 이하 벌금	10년이하 징역 & (필요적 병과)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일정금액 이상 가중처벌)
	감사인	5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몰수/추징	감사인	필요적 몰수·추징	(현행 유지)
	회사·	-	필요적 몰수·추징
손해배상	회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칙 → 단기시효 적용	감리기간을 고려, 시효 연장 :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8년
	감사인	(사업·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 4. 공시 확대 및 회계교육 강화

### (1) 회사·회계법인 공시 확대

□ 공시 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투명성 확보 추진

- (회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내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공시

\* (외감법 §7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전까지 (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4주 前까지) 감사인 제출 필요

- (감사인)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인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이사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함

□ (조치 사항) 외감법규 개정 추진

### (2) 회계교육 강화

- 회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 총괄

\* 금융위·회계기준원(공동주관), 금감원,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 대한상의 등

- 체계적·세부적 교육\*을 제공하는 가운데, 회계 담당 임·직원 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회계교육 의무화

- i) (맞춤형 현장 강의) 최근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업종별 현장 강의 활성화 (예: 보험업·리스업의 경영진·실무진에 대한 강좌)
  - ii) (On-Line 강좌 개발) 사례 중심의 이론과 수주·보험·바이오 등 최근 이슈 위주로 개발(강좌당 15분 내외의 One-point lesson)
  - iii) (IFRS 사례집 마련) 기준원·금감원·한공회에 누적된 다양한 실제·가상사례를 개발하여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 지원

\* 연구용역(기업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방안, '17.1~4월)을 통해 교육계획 수립

- (조치 사항) 회계교육협의회 운영 등 실무 추진 (회계기준원)

### (3) 조치 사항 : 외감법규 및 자본시장법규(필요시) 개정 (금융위)

## IV. 기대효과

◇ 내부감사-감사인 선임-제재까지의 과정에서 회사·감사인·감독 측면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회계 신뢰도 제고 기반 구축

### 1. 회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객관적인 외부감사 환경 조성

- '선택지정제'를 통해 감사인 지정시 회사가 선임권한을 가지고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어렵게 되어 독립적 감사 가능
  -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 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
- ⇒ 감사인 변경에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된 감사 가능
- 감사대상 회사·연결실체에 대해 비감사용역 규제를 강화하여 수익성 높은 비감사용역 수입과 감사결과간 연계 가능성 차단
  -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로 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 향상

### 2.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감리주기 대폭 감소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식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

### 3.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회사 감사를 허용하고,
  -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 수준 개선 노력 유도
  - 특히, 감사담당 이사의 성과·보수체계를 영업 중심에서 감사 실적 중심으로 바뀌도록 등록요건·평가기준 마련 → 품질 개선
- 적정 감사시간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여 충분한 감사시간을 바탕으로 감사인들이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유도
  - 핵심감사제(KAM) 활용 및 보고서 제출기한에 쫓기는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내실있고 신뢰성있는 감사보고서 생산 유도

### 4. 회사의 철저한 내부 회계관리를 통한 분식 소지 사전차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판단을 검토→감사 수준으로 강화하면 재무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현행 내부감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필요한 조사절차 등을 의무화하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내부고발 포상금 상향 및 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내부고발 풍토 조성

< 주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개 선 내 용	기 대 효 과
[회사] 분식가능성 최소화	<b>내부감사 통제 강화</b> (독립적 조사 및 증선위 보고 등)	내부 감사의 실질적 견제
	<b>회사 내부고발 활성화</b> (포상금 상향, 신고자 보호 강화)	분식회계 적발가능성 제고
	<b>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b> (감사인 인증 강화, 주중 보고 등)	회사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
	<b>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허용</b> (제한적으로 5일까지 연장)	불충분한 감사의견 제한 → 보고서 신뢰성 향상
[감사인] 감사품질 제고	<b>감사인 선임제도 개선</b> (직권지정 확대, 선택지정제 도입)	회사-감사인간 甲乙관계 해소 → 독립적 감사환경 조성
	<b>핵심감사제 확대 도입</b> (유의사항에 대한 감사내용 보장)	감사보고서 내실화 유도
	<b>비감사용역 제한 확대</b> (제한대상 및 연결실체로 확대 등)	회사에 대한 감사인 경제적 종속 완화 → 독립성 강화
	<b>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b> (한공회 자율규제 도입)	최소한의 감사품질 유지
[감독당국] 사전·사후적 감독 강화	<b>감사인 등록제 도입</b> (회계법인 품질관리평가 반영)	상장회사 감사품질 개선
	<b>감리인원·권한 강화</b> (실무인력 38명 → 66명으로 증원)	감리주기 단축 (25년→10년) → 회계부정 적발을 제고
	<b>회계부정 제재 강화</b> (과징금·형벌 강화, 몰수·추징)	일벌백계를 통한 분식회계· 부실감사 유인 감소
	<b>공시·회계교육 강화</b> (회계교육협의회 운영 등)	근본적인 회계문화 개선 → 회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V. 향후 추진계획

※ '공청회'(17.2월)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 확정 예정

추진과제	要 조치사항	시기
------	--------	----

### 1. (회사 측면) 분식회계 가능성 최소화

(1) 감사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외감법규 개정	'17.2분기중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외감법규 개정	'17.2분기중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외감법규 개정 (상장협) 자율등록	'17.2분기중 '17.2분기중
(4)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조정	자본시장법규 개정	'17.2분기중

### 2. (감사인 측면) 감사품질 제고

(1)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외감법규 개정	'17.2분기중
(2)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핵심감사제 도입)	(한공회) 감사기준서 개정	'17.2분기중
(3)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공인회계사법규 개정	'17.2분기중
(4) 표준 감사투입시간 규정	(한공회) 가이드라인 마련	'17.1분기중

### 3. (감독당국 측면)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1) 감사인 등록제 도입	외감법규 개정	'17.2분기중
(2)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	금감원 예산·조직 확충 외감법·실명법 개정	'17.1분기중 '17.2분기중
(3)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외감법규 개정 (필요시 자본시장법 개정)	'17.2분기중
(4) 회사·감사인 공시 강화	외감법규 개정	'17.2분기중
(5) 회계교육 강화	기준원 중심의 통합 시스템 운영	'17.1분기중